

한국옵티칼·니토옵티칼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 증거 무더기 내부 문건으로 드러난 쌍둥이 회사 ... “법인을 쪼개도 진실은 쪼개지지 않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이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일본 니토덴코 본사 아래에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됐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두 회사는 생산과 영업, 인사와 재무 전반을 공유하며 사실상 동일한 사업 단위로 기능해 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함께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문서가 증명하고 현장이 증언하고 있다”며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기술과 영업 정보를 공유해 온 하나의 사업에서 노동자만 끊어낸 것은 명백한 고용 회피”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인을 쪼갰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고용승계와 사과를 촉구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니토덴코

의 경영 개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투자과 차입, 예산 편성 등 핵심 의사결정이 모두 니토덴코 본사 사업 부문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단순한 지배주주 관계를 넘어 하나의 사업 단위로서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상법·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불법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두 회사는 생산과 기능, 거래처까지 공유하며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돼 왔다”며 “별도 법인을 이유로 고용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스스로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니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사장을 향해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고용승계 논의를 위한 교섭 테이블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은 사업 종료가 아니라 사업 부문의 이전에 불과하다. 고용승계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 ‘별개 회사’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한국니토옵티칼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교섭을 거부하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찢겨진 노란 봉투를 정부로 보냅니다”

한국GM, 하청 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 개정 노조법 시행 전부터 무력화 논란



GM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 120명이 정부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자본의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규탄했다.

GM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인 한국GM이 하청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하청업체 위장폐업과 집단해고를 강행했다. 하청업체가 여러 차례 바뀔 때도 유지됐던 고용승계 관행은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중단됐고, 노동자 120명 전원은 해고를 통보받았다.

선지현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11월 28일 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22년 투쟁 끝에 쟁취한 노조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에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하청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시하는 원청 한국GM이 있다”며 “한국GM은 스스로 진짜 사장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파견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0명 집단해고는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이며, 정부가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해고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이자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도”라며 “이미 법원은 한국GM 물류업무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서두른 것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최현옥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사무장은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는 발탁채용과 노조 탈퇴, 소송 취하를 강요하기 위한 압박”이라며 “노조법 2조가 시행되기도 전에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방치한다면 노조법은 종이 위 문장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항의 의미로 시행령이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후 시민들이 직접 쓴 항의 메시지를 담은 ‘찢겨진 노란봉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한국GM의 집단해고 철회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 요구를 담았다.